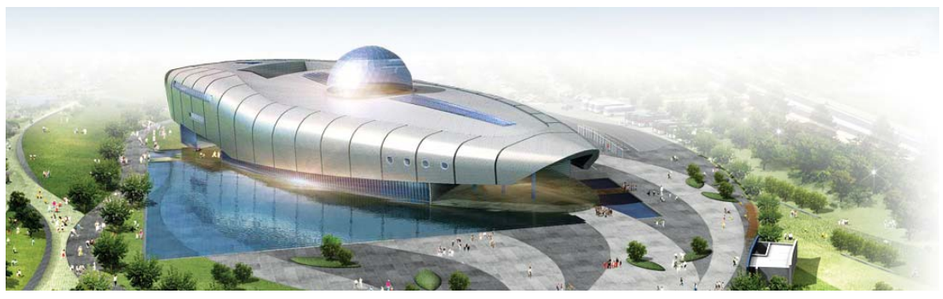

국비 끊긴 국립 광주과학관

공사중단 5개월…개관 난항

운영비 부담 비율 싸고 광주시·정부 줄다리기

'운영비 차후 협의' 협약 광주시 안일행정 도마에

지난해 10월 개관 예정이었던 국립 광주과학관이 정부의 국비 지원 중단으로 인해 5개월째 공사가 중단되는 등 개관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와 광주시가 개관 이후 과학관 운영비 분담 비율을 놓고 서로 줄다리기하는 과정에서 광주시가 정부에 운영비 전액 부담을 요구하자 정부가 국비 지원을 갑작스레 중단했기 때문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준공, 10월 개관할 예정이었던 국립광주과학관 건설사업이 지난해 12월 초 중단돼 지난 30일 현재 5개월째 중단되고 있다. 광주 국립과학관은 광주·전남의 과학기술 저변 확대를 위해 국비 594억원, 시비 254억원 등 총 84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국책사업으로,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부지 9만8248㎡에 건립중이다.

과학관에는 전시·교육시설과 사무·연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현재 골조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는 등 전체 공정률은 82%로, 개관을 눈 앞에 두고 있었지만,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과학관 건설비 97억원의 국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12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정부가 국비 지원을 중단한 배경에는 과학관 개관 이후 운영비 분담비율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관 이후 매년 과학관 운영에 들어갈 운영비 90억원 중 입장료 등 자체수입 7억원(추정)을 제외한 83억 원에 대해 국가 60%, 광주시 40%의 운영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광주시는 국립 과학관이 국가사업인 만큼 정부가 전액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와 광주시가 운영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지난 2008년 10월 체결한 업무협약서 때문이다. 당시 광주시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는 건설비의 경우 총 공사비의 70%를 중앙정부가, 30%를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합의했지만, 운영비 분담방식은 추후 협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정부는 줄곧 운영비 분담비율을 놓고 협의를 벌였지만, 분담비율에 대한 의견차이가 커 결국 정부가 운영비 분담비율이 합의될 때까지 과학관 건설비 국비 97억원을 중단한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립 광주과학관은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국립 과학관을 전국에 확대하기로 한 국책사업인 만큼 운영비 전체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형평에 국책사업 운영비까지 떠넘기는 것은 중앙정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부산에 건립중인 국립 부산과학관의 경우 운영비 분담을 정부 60%, 부산시 40%로 합의한 만큼 지자체 간 형평성을 들어 광주시가 운영비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정부는 운영비 분담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립과학관 개관이 이뤄질 경우 향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학관 건설비 국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시의 안일한 협약체결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시의회 김민종(민주·광산 4) 의원은 지난 3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횡포에 가까운 처사"라며 "조속한 개관을 위해 중앙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미 건립된 국립 과학관의 경우 2011년 기준 약 550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중앙정부가 부담했으며, '과학관 육성법' 제3조에 따르면 국립과학관은 국가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학관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중앙정부는 국가의 의무를 지자체에 떠넘기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08년 정부와 업무협약 과정에서 운영비는 차후 협의한다는 논란의 여지를 제공한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도 문제"라고 질타했다.

한편, 사정은 대구시도 마찬가지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정부와 같은 해, 같은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정부는 광주와 마찬가지로 대구시에도 과학관 건립비용 중 일부 국비 지원을 중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7년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국립과학관을 전국 권역에 확대하기 위해 호남권의 경우 광주시에, 대구·경북지역(대경권)은 대구시에, 부산·경남(동남권)지역은 부산시에 각각 건립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미 쇠고기 수입중단 약속 지켜라"

민주당, 광우병 사태 … '검역주권' 총공세

박주선 "WTO 수입중단 권리마저도 포기"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30일 정부가 광우병 발생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여갔다.

문성근 대표 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008년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정부가 국민 앞에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빠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최고위원도 "정부는 4년 전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당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한미동맹의 가치를 가볍게 보지 않지만,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하는 정권을 옹호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남윤인순 최고위원은 "광우병 발병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던 신문 광고의 약속이 광우병에 대한 위험에 촛불을 들었던 국민운동을 멈추게 하기 위한 거짓 약속이 아니었나 생각을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을 주도했던 새누리당 김종훈 당선자는 이날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광우병 발발시 즉각 수입중단을 약속했던 지난 2008년 5월 정부 광고에 대해 "나는 사실 그 광고에 대해 특별히 기억하고 있지는 않다"며 "저는 제가 광고를 제작하거나, 광고주가 아니었던 그런 입장이어서…"라고 말했다.

한편,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우병 발생 시 쇠고기 수입국은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잠정적으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보고서가 공개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미 무역대표부의 '2012년 동식물 위생 및 검역 보고서' 번역본에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곡물, 가축, 가금류 보호를 위해 식품안전 규정 및 조치 등을 포함한 규정을 채택할 권리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보호수준을 설정할 권리가 있다"고 적혀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조사단 미국 가긴 가는데… 지난 30일 인천공항에서 주이석 검역검사본부 부장을 단장으로 학계, 소비자단체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광우병 민간합동 현지조사단이 출국에 앞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사단은 오는 9일까지 열흘간 미 농부무를 방문해 광우병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사료안전실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쇠고기 원산지 속이면 형사입건

농식품부, 4500명 투입 무기한 특별단속

농림수산식품부는 쇠고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를 1일부터 무기한 특별단속한다.

미국에서 최근 소 뇌해면상뇌증(BSE)이 발생하고서 수입 쇠고기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거래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단속 대상은 수입산 쇠고기이력제 거래신고 업소 가운데 최근 6개월 실적이 없거나 매입·매출물량의 차이가 있는 2000여 곳이다. 과거 위생감시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도 포함된다.

이번 단속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특별사법경찰관 1439명과 민간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명이 동원된다.

국내산으로 표시된 쇠고기는 현장에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고서 표시가 의심되면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DNA)를 분석함으로써 국내산 여부를 판정한다.

관세청의 업체별 쇠고기 수입상황을 실시간으로 전국 단속반에 알려 최종 판매 단계까지 철저한 추적조사를 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낮日만평

- 김종두

그래서 내가 미국 없인 못 산다

녹차수도 보성

보성에 오시면
꼭 세 잔의 차를 함께 나누세요

한 잔의 차를 마시면 손님이지만
두 잔의 차를 함께하면 가족이 되고
세 잔의 차를 나누면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 됩니다.

제38회 보성다향제 녹차대축제
- 기 간 : 2012. 5. 16.(수) ~ 5. 20.(일)/5일간
- 장 소 : 한국차소리문화공원(차밭일원)
- 행사내용 : 차만들기, 찻잎따기, Tea Art Festival, 무아차회 등
- 문 의 처 : 보성군 문화관광과(☎061-850-5214)

차만들기 체험장 운영
- 기 간 : 2012. 5. ~ 10월말
- 장 소 : 한국차박물관외 14개소
- 문 의 처 : 보성군 녹차산업과(☎061-850-5632)
  전남관광협회(☎061-285-0832)

DAUM 전라남도관광협회 검색

보성군